

주간 통일정세

2017-3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내용 |
|-------|------|--|
| 정치 | 7.26 | 북한군, 7·27 결의대회...“반미 승리 전통 이어져”(연합뉴스) 北 “적 오판하면 美심장부 핵 선제타격”...정전협정 중앙보고대회(연합뉴스) |
| | 7.27 | 北, 정전협정 64주년 맞아 대미대결 강조하며 결속 촉구(연합뉴스) |
| | 7.28 | 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행보...6·25전사자묘 참배(연합뉴스) |
| 군사 | 7.23 | 北 신문 “ICBM은 사거리 6천400km 이상 미사일”(연합뉴스) NHK “北잠수함, 동해서 1주간 이례적 활동...미군 경계 강화”(연합뉴스) |
| | 7.24 |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kg-1톤(연합뉴스) |
| | 7.25 | CNN “북한, 금주 내 추가 미사일시험 준비 정황 포착”(연합뉴스) |
| | 7.26 | 美 국방부 “北, 이르면 내년 핵 ICBM 실전배치...美 본토 타격가능”(연합뉴스) |
| | 7.28 | 美 고위관리, 北 내년 핵 ICBM 보유설에 “곧 기정사실 될 것”(연합뉴스) |
| 경제 | 7.26 | ‘교역제재’ 속에도...중국의 상반기 대북 수출 18% ↑(연합뉴스) 北, 서양 관광객 연간 4천~4천500명 정도 유치(연합뉴스) |
| | 7.27 | “중국 내 北식당, 비자규제 강화로 ‘취청’...폐업위기”(연합뉴스) |
| 사회 문화 | 7.24 | 북한전문여행사 “北, 올해 대동강맥주축전 취소”(연합뉴스) “북한서도 데스크톱보다 노트북·태블릿PC 인기”(연합뉴스) |
| | 7.25 | “北 고려항공 항공기 1대 8개월째 운항기록 없어”(연합뉴스) |
| | 7.26 | 美 업체 “北 소수 인터넷 유저, SNS·인터넷 쇼핑 이용”(연합뉴스) |
| 외교 국방 | 7.22 | 美, 北여행 전면금지...웹미어 사망 결정적 계기(연합뉴스) “美 하원 아태 소위, 27일 ‘북한여행통제법’ 심의”(연합뉴스) 美, 유엔주재 北대사 비자갱신 2개월 가까이 거부...교도 “이례적”(연합뉴스) “EU, 핵·미사일 도발 제재 차원 유럽내 북한노동자 송환추진”(연합뉴스) |
| | 7.23 | 던퍼드 美 합참의장 “대북 군사우선도 생각해야”(연합뉴스) “美, 29~30일 알래스카서 ‘北위협 대응’ 사드 요격시험”(연합뉴스) |
| | 7.25 | 北, 美 CIA 국장 ‘김정은-핵 분리’ 언급에 “美심장부 타격” 위협(연합뉴스) 북한 “미국의 北 여행금지 조치에도 관광산업 타격 없다”(연합뉴스) |
| | 7.26 | 주북한 중국대사관, 건군 90주년 행사...北인민무력성 부상 참석(연합뉴스) “리용호 北외무상 내달 초 필리핀 ARF 참석 통보”(연합뉴스) |
| | 7.27 | 美 상원, 전방위 대북제재법 처리 합의...이르면 이번주 통과 전망(연합뉴스) |

| | |
|------|--|
| 7.28 | 北 “북미 대결구도 완전 바뀌어…美 살길 적대정책 철회뿐”(연합뉴스) |
| | “러시아, 한반도 위기해결 구상 北측에 전달”(연합뉴스) |
| | 주북 러 대사관, 송실학교 기념석 발견 10년만에 공개 사연은(연합뉴스) |
| |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 1년 6개월 만에 곧 ‘지각 부임’(연합뉴스) |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 보도일 | 보도내용 | 수행자 | 비고 |
|------|--------------|---------------|----|
| 7.28 | 6·25 전사자묘 참배 | 황병서, 리명수, 박영식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7. 28.

■ 김정은, 보름 만에 공개행보...6·25전사자묘 참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평양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힘.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돌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6·25전쟁 참전 군인들의 ‘숭고한 조국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를 전체 군 장병들과 노동당원, 근로자 및 새로운 세대들이 ‘귀중한 사상 정신적 재부’로 간직하고 계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7. 26.

■ 북한군, 7·27 결의대회...“반미 승리 전통 이어져”(연합뉴스)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맞아 25일 육·해·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26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4돌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25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됐다”며 황병서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결의대회에서 연설한 황병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김일성 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비범한 영군술이 안아온 승리”라며 “반제·반미 전승의 역사와 전통은 오늘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즐기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함.

■ **北 “적 오판하면 美심장부 핵 선제타격”…정전협정 중앙보고대회(연합뉴스)**

-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64주년을 앞둔 26일 평양에서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통고 없이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함.
-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해방전쟁(6·25 전쟁) 승리 6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6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됐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박영식 인민무력상 연설 내용을 전함.
- 우리의 국방부 장관 격인 박영식은 연설에서 “만약 적들이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오판하고 ‘핵 선제타격론’에 계속 매달린다면 백두산 혁명 강군은 이미 천명한 대로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핵 선제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함.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7. 27.

■ **北, 정전협정 64주년 맞아 대미대결 강조하며 결속 촉구(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과 대결에서의 ‘최후 승리’를 위한 단결과 자립정신을 강조하며 주민 결속을 독려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전승 업적을 최후 승리의 축포성으로 빛내어 나가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미제가 흰 기를 들고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 날까지 더 억세게, 더 빨리 전진하고 비약해 나가자, 이것이 전승 절(정전협정 체결일)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지는 심장의 맹세”라고 주장함.
- 이어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미제의 최후 발악은 앞으로 더 우심해질 것이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련도 각오해야 한다”며 ‘정신력’을 강조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7. 23.

■ **北 신문 “ICBM은 사거리 6천400km 이상 미사일”(연합뉴스)**

-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해온 북

- 한이 관영 매체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ICBM의 개념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위력한 핵 공격 수단 대륙간탄도로켓’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은 한마디로 말하여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정해진 비행궤도, 즉 탄도를 따라 비행하는 로켓을 말한다”고 설명함.
 - 특히 신문은 “일반적으로는 핵탄두를 장착하고 6천400km 이상의 사거리를 탄도를 그리며 비행하여 목표물에 도달하는 지상대지상 장거리 전략 탄도로켓의 일종”이라면서 ICBM의 기준 사거리를 ‘6천400km’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함.

■ **NHK “北잠수함, 동해서 1주간 이례적 활동…미군 경계 강화”(연합뉴스)**

-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약 1주일에 걸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NHK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23일 전함.
- 미군은 이를 지금까지 없었던 특이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함.
- NHK에 따르면 해당 잠수함은 디젤형 로미오급으로, 미국 감시기록에서 이 잠수함은 보통 4일 정도 기간에 활동을 종료했지만, 이번에는 활동 기간이 약 1주일에 달해 현재까지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짐.

2017. 7. 25.

■ **CNN “북한, 금주 내 추가 미사일시험 준비 정황 포착”(연합뉴스)**

- 북한이 이번 주 내로 추가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이 미 국방부 관료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함.
- 익명을 요청한 이 관료는 CNN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고 밝힘.
- 발사장비가 포착되면 통상 6일 안에 실제 발사로 이어진다고 이 관료는 덧붙였으며, 포착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7월 27일임.

2017. 7. 26.

■ **美 국방부 “北, 이르면 내년 핵 ICBM 실전배치…美 본토 타격가능”(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함.

-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 ICBM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 이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0년에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미 정보기관 분석에서 예상 시점을 2년이나 앞당긴 것이어서 주목됨.

2017. 7. 28.

■ **美 고위관리, 北 내년 핵 ICBM 보유설에 “곧 기정사실 될 것”(연합뉴스)**

-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이것이 곧 기정사실이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것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으며,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지금 정점에 거의 와 있다”고 평가함.
- 그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과거보다 더욱 자주 도발한다고 해서 (군사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왜냐하면 군사적 대응은 도발의 강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함.

나. 한국 및 미국

2017. 7. 24.

■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추진…사정 800km 미사일 탄두 500kg→1톤(연합뉴스)**

- 정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됨.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간에 논의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동의를 얻어 한미 미사일지침을 5년만에 재개정할 경우 우리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현무2-C)에 최대 1t짜리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됨.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7. 26.

- **‘교역제재’ 속에도…중국의 상반기 대북 수출 18%↑(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북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반기 중국의 대 북한 수출은 오히려 18%나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대북한 수입은 북한의 석탄 수출이 급감하면서 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됨.
- 26일 한국무역협회 중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6억 5천 6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함.
- 특히 항공유 수출은 지난해 4월 1차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됐음에도 꾸준히 증가함.

- **北, 서양 관광객 연간 4천~4천500명 정도 유치(연합뉴스)**

-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북한은 연간 4천~4천500명 정도의 서양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 26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대다수인 95% 정도는 중국인이라며 이같이 밝힘.
- 코커렐 대표는 “중국인 북한 관광객 대다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로 당일치기 관광을 다녀온다”면서 “이들은 산업화 이전 중국의 옛날 모습을 그리위하며 북한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2017. 7. 27.

■ “중국 내 北식당, 비자규제 강화로 ‘취청’…폐업위기”(연합뉴스)

-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이미지 하락과 비자취득 요건 강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북한 식당들이 심각한 영업난에 빠졌다고 도쿄신문이 27일 보도함.
- 도쿄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식당은 통상 종업원들의 노래와 연주를 세일즈 포인트로 해 수입을 얻고 있지만 올해 봄 이후 중국 당국의 북한 여성에 대한 예능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으며, 여종업원들이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은 공연 활동이 아닌 만큼 ‘비자 외 활동’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 묵인되던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심해짐.
- 신문은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독자 제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비자 취득 요건 강화와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 확대 등으로 북한 식당의 종업원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北京) 이외의 북한 식당은 수입이 크게 줄었고 북경 시내에 있는 십 수 개의 북한 식당 중 몇 곳은 조만간 폐점할 것으로 예상됨.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7. 24.

■ 북한전문여행사 “北, 올해 대동강맥주축전 취소”(연합뉴스)

- 북한이 이달 말부터 8월까지 개최할 예정이던 ‘제2차 평양 대동강맥주 축전’을

막판 취소했다고 북한전문 여행사가 밝힘.

-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s)는 23일 “애석하게도 2017년 평양(대동강) 맥주 축전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오늘 통지받았다”고 영문 블로그를 통해 공지함.
- 여행사는 “취소 이유는 불확실하며, 자세한 정보를 조만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북한서도 데스크톱보다 노트북·태블릿PC 인기”(연합뉴스)

- 북한에서도 최근 데스크톱 컴퓨터보다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 휴대가 편한 컴퓨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24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노트북컴퓨터는 5천 600만 달러(한화 약 625억5천만 원)어치로 2015년의 3천 600만 달러어치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전함.
- 또 북한이 2014년 이전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던 태블릿PC도 지난해에는 수입액이 400만 달러에 근접했지만, 2008년에 1천 500만 달러에 달했던 데스크톱 컴퓨터의 수입액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NK뉴스는 덧붙임.

2017. 7. 25.

■ “北 고려항공 항공기 1대 8개월째 운항기록 없어”(연합뉴스)

- 북한의 고려항공이 최근에 들여온 국제선 항공기 1대가 8개월째 운항하지 않고 지상에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함.
-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체 번호가 ‘P-672’인 고려항공의 An-148 항공기가 지난해 11월 말 이후 8개월째 운항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힘.
- 현재 고려항공이 해외에 취항할 수 있는 국제선 항공기는 러시아 투폴레프사에서 제작한 Tu-204와 안토노프사의 An-148 각각 2대로, 모두 4대에 불과함.

2017. 7. 26.

■ 美 업체 “北 소수 인터넷 유저, SNS·인터넷 쇼핑 이용”(연합뉴스)

- 북한에서 인터넷 사용이 허가된 소수 특권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외국 네티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터넷 사용 행태를 보였다고 미국 민간업체가 주장함.
- 미국의 보안전문업체인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는 지난 25일 발표한 ‘북한의 통치 엘리트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26일 보도함.
 - 이 업체는 보고서에서 “인트라넷 이용이 허가된 선택받은 소수 가운데서도 일부만이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다”며 “집권계층의 가족 구성원이나 신뢰받는 일원”이라고 설명하며, “북한 이용자들은 SNS 계정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둘러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가장 널리 사용된 SNS 사이트는 페이스북이었다고 전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7. 22.

■ 美, 北여행 전면금지...워비어 사망 결정적 계기(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전함.
-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협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틸러슨 장관이 미국 시민권자의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힘.
- 그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할 때 미국 여권은 유효하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경우는 시효가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해서만 허용된다”고 설명함.

■ “美 하원 아태 소위, 27일 ‘북한여행통제법’ 심의”(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의회 하원에서도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이 다음 주 관련 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여행 통제법’(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H.R.2732)을 상정·심의한 뒤 표결할 예정임.

- 이 법안은 민주당 중진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했으며,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의 관광 목적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美, 유엔주재 北대사 비자갱신 2개월 가까이 거부…교도 “이례적”(연합뉴스)**

- 미국이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비자 갱신을 두 달 가까이 거부했다가 나중에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미북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자 대사는 비자 유효기간이 올해 5월 22일이어서 3월 갱신 신청을 했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 두 달 가까이 될 때까지 갱신하지 않았다. 이어 북한 유엔 대표부가 이달 1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한 비공식 모임에서 비자 갱신을 해주지 않은 미 정부를 비난하자, 그 이튿날인 14일 비자를 갱신함.
- 북한 관리는 교도통신에 “무슨 이유로 갱신절차가 그리 오래 걸렸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일종의 적대행위라고 본다”고 언급했으며,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2017. 7. 23.

■ **던퍼드 美 합참의장 “대북 군사옵션도 생각해야”(연합뉴스)**

-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2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던퍼드 의장은 이날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북 군사옵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그런 견해를 약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함.
- 던퍼드 의장은 “(한반도에서의 군사 대치는)끔찍하고 우리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명 손실을 일으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내가 상대국들에게 계속 얘기해왔듯이 내게 있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란 대북 군사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이곳 콜로라도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강조함.

■ **“美, 29~30일 알래스카서 ‘北위협 대응’ 사드 요격시험”(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이달 초에 이어 이르면 금주 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시험을 추가로 진행함.
- AP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알래스카 주(州) 코디액 섬에서 또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시험을 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이번 요격시험은 코디액의 태평양 우주발사 시험장에서 오는 29일 저녁 7시부터 30일 오전 1시30분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며, 요격시험이 미뤄질 경우 30일~31일 또는 31일~8월1일에 진행기로 함.

2017. 7. 25.

■ **北, 美 CIA 국장 ‘핵무기-핵 분리’ 언급에 “美심장부 타격” 위협(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핵무기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미국의 심장부 타격’을 위협하며 반발함.
-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최종 목표가 우리의 정권 교체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외정보를 총괄한다는 작자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고 수뇌부와 떼어놓을 수 있다고 망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무지몽매의 표현”이라고 거칠게 비난함.

■ **북한 “미국의 北 여행금지 조치에도 관광산업 타격 없다”(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북한 관광산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함.
- 한철수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부회장은 이날 평양에서 AFP 특파원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이 더는 북한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해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이같이 밝힘.
- 한 부회장은 이런 미국의 조치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제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강조함.

2017. 7. 27.

■ **美 상원, 전방위 대북제재법 처리 합의...이르면 이번주 통과 전망(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함.
- 미 상원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처리와 관련해 26일 성명에서 “법안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힘.
-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전날 하원에서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됨.

■ **北 “북미 대결구도 완전 바뀌어...美 살길 적대정책 철회뿐”(연합뉴스)**

-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 “조선(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조미(북미) 대결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며 미국에 ‘적대시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7·27로 빛나는 선군조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제목의 군사논평원 글에서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6·25 전쟁) 때의 쓰디쓴 후회를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군사논평원은 북한의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시험발사를 “우리 공화국의 무진 막강한 군력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는가를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고 미국을 그야말로 기절초풍하게 만든 역사의 대승리”라고 평가함.

나. 북·중 관계

2017. 7. 26.

■ **주북한 중국대사관, 건군 90주년 행사...北인민무력성 부상 참석(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에 중국이 미국과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서면서 북중관계가 불협화음을 내는 가운데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이 주(駐)북한 중국대사관에서 개최한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행사에 참석함.
- 미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 제재에 나서는 등 중국에 대북압박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다시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26일 주북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중국대사관에서 개최한 건군

90주년 기념행사에 강순남 인민무력성 부상과 북한군 관계자, 외무성 관계자 등이 참석함.

다. 북·일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북·러 관계

2017. 7. 27.

■ “러시아, 한반도 위기해결 구상 北측에 전달”(연합뉴스)

- 최근 북한을 다녀온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표가 방북 당시 한반도 사태 해결에 관한 자국의 구상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2~25일 방북했던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가 자국이 마련한 한반도 위기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북한 측에 제시했고 북측이 이에 관심을 보였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자국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함.
- 소식통은 “(부르미스트로프 대사 방북에서) 한반도 사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특히 러시아 측은 (한반도 사태의) 단계적 해결에 관한 러시아 측 계획을 설명했고 이에 북한 측이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함.

2017. 7. 28.

■ 주북 러 대사관, 송실학교 기념식 발견 10년만에 공개 사연은(연합뉴스)

- 28일 주북 러시아 대사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대사관은 최근 관내에서 신흥철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실전문학교 식수 기념식 제막행사를 진행함.
- 대사관은 10년이 지나서야 기념식을 공개한 데 대해 “솔직히 우리가 기념식을 외부에 공개하고 전시하게 되면 북한이 기념식을 돌려달라는 인도 요청을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어 “송실전문학교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1911년부터 1913년까지 다녔던 학교”라며 “우리는 김형직이라는 이름과 연관된 모든 것이 북한에서 거대하고 신성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7. 22.

■ “EU, 핵·미사일 도발 제재 차원 유럽내 북한노동자 송환추진”(연합뉴스)

- 유럽연합(EU)가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의 유입을 금지시키고 현재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EU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함.
- EU는 이들 북한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 등으로 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제재강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짐.
- EU는 17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외무이사회에서 대북 결정문을 채택하고 “자체 제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절한 추가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한 노동자의 유입 금지와 송환 논의는 해당 외무이사회에서 시작됨.

2017. 7. 26.

■ “리용호 北외무상 내달 초 필리핀 ARF 참석 통보”(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내달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다는 뜻을 주최 측에 통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짐.
-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에 리 외무상의 ARF 참석 의사를 통보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짐.
- 최희철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필리핀을 방문하기 위해 25일 평양을 떠난 것도 리 외무상의 ARF 참석을 계기로 한 필리핀 측과의 외교적 조율을 위한 행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2017. 7. 28.

■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 1년 6개월 만에 곧 ‘지각 부임’(연합뉴스)

- 약 1년 반 동안 공석이던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곧 부임할 것으로 보임.
- 28일 현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장고 끝에 문정남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의 부임 승인)을 최근 부여함. 외교가는 이에 따라 문 신임 대사가 비자를 발급 받는대로 이탈리아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문 신임 대사는 주 태국 대사관 외무성 국제기구국 등을 거친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알려짐.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한국 | 미국 |
|-------|------|---|---|
| 한미 관계 | 7.25 | “한미FTA 공동위, 조직개편후 서울서 열자”...미국에 공식 제안(연합뉴스) | USIR “서울서 FTA공동위 열자” 韓정부 서한 받아 검토 중(연합뉴스) |
| | 7.27 | 한미, 내달초 외교장관회담 추진...北도발 대응기조 조율(연합뉴스) | |
| | 7.28 |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 핵·미사일 대응 공조 지속” 재확인(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중국 |
| 한중 관계 | 7.26 |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 개최...협력 강화 방안 논의(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일본 |
| 한일 관계 | 7.23 | | 日, 군함도 강제노역정보센터 설립약속하고도 “연내 계획없어”(연합뉴스) |
| | |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표현, 韓-美日 절충결과(연합뉴스) | |
| | 7.24 | | 韓 화해치유재단이사장 사의에 日 “한국에 합의이행 촉구하겠다”(연합뉴스) |
| | 7.25 | 정부 “위안부합의 입장 정리때까지 화해·치유 재단사업 지속”(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한국 | 러시아 |
| 한러 관계 | | | 특이사항 없음. |

2. 주변국정세

■ 개요

| 분류 | 일자 | 미국 | 중국 |
|-------|------|--|--|
| 미중 관계 | 7.22 | 美中해군수장 영상통화 중에 “美 中에 北잠수함 감시 요청”(연합뉴스) | |
| | 7.23 | | 中 철강협회 “미국 수입 통제시 보복해야”...무역갈등 비화조짐(연합뉴스) |
| | | | ‘대담한’ 中정보함, 美·濠합동훈련 해역부근 濠 EEZ에 출현(연합뉴스) |
| | 7.24 | “트럼프, 美해군에 남중국해 ‘1년 항행계획’ 승인”...中 반발예상(연합뉴스) | |
| | | | 中, 美합참의장 대북 군사옵션 거론에 “무력으로 해결 못 해”(연합뉴스) |
| | 7.25 | 美정찰기, 서해 인근서 中전투기와 대치...“충돌 피하려 회피”(연합뉴스) | 中전투기 ‘90m 초근접’ 위협말라 지적에 中 “美 정찰중단하라”(연합뉴스) |
| | | | |
| | 7.26 | 화난 美, 中 겨냥해 “제재 강화...대가치를 짓·일방조치 불사”(연합뉴스) | |
| | | | 中, 북중접경서 세관단속 강화하라는 美주문에 거부 입장 확인(연합뉴스) |
| 7.27 | | 트럼프 압박에 쌀 최대생산국 中, 미국산 쌀 수입절차 착수(연합뉴스) | |
| 미일 관계 | 7.26 | 미일, 내달 중순 외무·국방장관회의 개최 조율...대북공조 강화(연합뉴스) | |
| | 7.28 | | 日언론 “美, 일본에 北과 거래 |

| 분류 | 일자 | 미국 | |
|-------|------|---|--|
| | | 미국 | 러시아 |
| 미러 관계 | | | 중국은행 계좌 폐쇄해달라 요청”(연합뉴스) |
| | 7.22 | 트럼프 러 제재해제 함부로 못한다…美하원 25일 러 제재안 처리(연합뉴스) | |
| | | “세션스 법무, 작년 러 대사와 ‘대선논의’…美정보당국에 포착”(연합뉴스) | |
| | 7.23 | 美의회 북한-러시아-이란제재법 패키지 처리키로…25일 하원표결(연합뉴스) | 크렘린, 美 의회 대러시아 추가제재법안 추진에 “아주 부정적”(연합뉴스) |
| | | 로저스 美NSA 국장 “러시아와 사이버 협력할 시점 아니다”(연합뉴스) | |
| | 7.24 | 백악관 “美정부, 러시아 제재 법안 기쁘게 지지”(연합뉴스) | |
| | | | 푸틴 “우리가 했다면 발각되지 않아”…트럼프에 해킹 부인(연합뉴스) |
| | | | 러 “美 회담 안보리 대북 결의안 수용 못해…北 경제 악화 겨냥”(연합뉴스) |
| | 7.25 | 트럼프 사위 쿠슈너 청문회 출석…“러시아와 공모 안했다”(연합뉴스) | |
| | | 美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지원 검토”…러시아 ‘발끈’(연합뉴스) | |
| | 7.26 | | 크렘린, 美 대러 추가제재 추진에 “러·미 관계에 슬픈 일”(연합뉴스) |
| | 7.27 | | 러시아, 美 추가 제재 움직임에 보복책 마련(연합뉴스) |
| | 7.28 | | 푸틴, 美 대러 추가 제재 움직임에 보복 조치 경고(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중국 | 일본 |
|-------|------|---|---|
| 중일 관계 | 7.24 | “日 ‘군함도’서 저지른 죄악 공개하라”…中신화통신 ‘공세’(연합뉴스) | |
| | 7.25 | 中 해경선, 日과 영유권분쟁 센카쿠 해역에 또 진입(연합뉴스) | |
| | | 日 ‘중국산 관세 특혜’ 2019년 이후도 사실상 유지(연합뉴스) | |
| | 7.26 | 中, 스파이혐의 구속 일본인 4명 석방…“혐의 해소”(연합뉴스) | |
| | 7.28 | | “日,대북독자제재 대상에 중기업 2개 추가…자산동결 대상 확대”(연합뉴스) |
| 분류 | 일자 | 중국 | 러시아 |
| 중러 관계 | 7.25 | 미국 대러제재 강화에 중국 미소…“중러무역·투자 호재”(연합뉴스) | |
| 분류 | 일자 | 일본 | 러시아 |
| 일러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7. 25.

■ “한미FTA 공동위, 조직개편후 서울서 열자”…미국에 공식 제안(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청에 대해 24일 “서울에서 정부 조직개편 절차 완료 후 열자”고 제안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난 12일 서한에 대해 백운규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힘.
- 백 장관은 서한에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임.

■ USTR “서울서 FTA공동위 열자’ 韓정부 서한 받아 검토 중”(연합뉴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자’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제안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임명을 요청한 USTR의 한 관리의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산업부의) 서한을 받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2017. 7. 27.

■ 한미, 내달초 외교장관회담 추진…北도발 대응기조 조율(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내달초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양자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27일 파악됨.
-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내달 7일 열리는 ARF에 나란히 참석하는 기회를 활용해 마닐라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한미 외교당국간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를 발사한데 이어 추가 도발을 준비중인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두 장관이 만나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7. 7. 28.

■ **한미 외교장관 통화…“北 핵·미사일 대응 공조 지속” 재확인(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함.
-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장관과 틸러슨 장관이 이날 오전 일찍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양국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 또 “한·미 협력 강화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고 전함.

나. 한·중 관계

2017. 7. 26.

■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 개최…협력 강화 방안 논의(연합뉴스)**

-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지난 25일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장관급인 세전화(解振華)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만찬을 갖고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힘.
- 이번 만찬은 같은 날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세 대표 주최로 이뤄짐.
- 양국 대표는 파리협정 이행을 지속 견지해 나가면서, 당사국 총회 계기 이행지침 협상에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다. 한·일 관계

2017. 7. 23.

■ **日, 군함도 강제노역정보센터 설립약속하고도 “연내 계획없어”(연합뉴스)**

- 일본이 2년전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카시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약속한 강제동원 정보센터 설립이나 안내판 설치를 연내에 이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군함도는 1940년대에 많은 조선인이 이 섬의 해저탄광으로 징용돼 강제 노동에 시달린 한이 서린 곳이지만, 일본측의 집요한 시도로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 당시 우리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역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하였고, 이에 일본측은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설립을 비롯해 강제동원 피해자를 기리고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막판 협상이 타결됐으나, 나가사키시 관계지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센터 설립 등 이행조치와 관련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힘.

■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표현, 韓-美日 절충결과”(연합뉴스)**

- 독일 함부르크에서 6일 나온 한미일 공동성명에 그에 이틀 앞서 발사된 북한의 ‘화성-14형’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표현된 것은 3국의 이견 조정 결과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대륙간탄도탄(ICBM)이라고 지칭하려 했으나, 한국은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함.
-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ICBM이라고 인정하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이 커진다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표현 수위를 낮추려 한 것이라고 주장함.

2017. 7. 24.

■ **韓 화해치유재단이사장 사의에 日 “한국에 합의이행 촉구하겠다”(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한일합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의 사퇴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의 활동 그 자체가 종료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약 10억엔(약 100억5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스가 장관은 “한일합의는 한일 양국이 확인한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합의이기도 하다”며 “합의를 착실하게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계속 한국 측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발언함.

2017. 7. 25.

■ 정부 “위안부합의 입장 정리때까지 화해·치유 재단사업 지속”(연합뉴스)

-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검토 중”이라며 “합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화해·치유) 재단 사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조 대변인은 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를 위한 외교부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 중”이라며 “조만간 발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위안부 합의 검토 TF가 발족하면 “(한일 합의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7. 22.

■ 美中해군수장 영상통화 중에 “美, 中에 北잠수함 감시 요청”(연합뉴스)

-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遼寧)함 전단이 홍콩 기항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미국 구축함이 추적하는 등 미중 양국 해군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지난 20일 이뤄진 미중 해군 수장 간 영상통화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함.
- SCMP는 존 리처드슨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선진룽(沈金龍) 해군 사령원(사령관)과의 통화 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과 받아들일 수 없는 군사행동에 대해 양국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함.
-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감시와 정보 제공 등을 중국에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함.

2017. 7. 23.

■ **中 철강협회 “미국 수입 통제시 보복해야”…무역갈등 비화조짐(연합뉴스)**

-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신창(李新創) 중국 철강공업 협회 상무부비서장은 정부가 중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미국이 중국의 철강 제품 수입을 제한한다면 미국의 자동차, 농산물 수입 제한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중국이 더이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양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 대화’를 열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며 한 외신은 철강 부문에서 과잉생산을 제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거부한 것을 대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함.

■ **‘대담함’ 中정보함, 美 濠합동훈련 해역부근 濠 EEZ에 출현(연합뉴스)**

- 중국의 첨단 정보수집함이 호주와 미국 간에 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호주 북동부에 출현해 첩보 활동을 폈다고 호주 국방부가 밝힘.
- 호주 국방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호주와 미국 간 군사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퀸즐랜드 주 인근 산호해(Coral Sea)에서 중국 정보함이 포착됐다고 밝힘.
- 이 함정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815형(Type 815) 둥다오급(Dongdiao-class) 정보수집함으로, 감청 등 첨단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트럼프, 美해군에 남중국해 ‘1년 항행계획’ 승인”…中 반발예상(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에 남중국해 순찰 작전 재량권을 확대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함.
- 남중국해는 중국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해역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베트남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음.
- 중국 런민(人民)대 스인홍(時殷弘) 국제관계학 교수는 SCMP에 “미 해군 군함이 최근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안에서 순찰했을 때 중국이 항의했다”며 “이번 조치가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함.

2017. 7. 24.

■ **中, 美합참의장 대북 군사읍선 거론에 “무력으로 해결 못 해”(연합뉴스)**

-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 한다고 거론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던퍼드 의장의 발언에 대해 평론해 달라는 요청에 “중국은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껏 군사적 수단이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다”면서 “군사적 수단은 더 큰 재난을 일으킬 뿐이고, 유관 각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답변함.
 - 루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외교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거론한 쌍궤병행(雙軌並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주장함.

2017. 7. 25.

■ **美정찰기, 서해 인근서 中전투기와 대치…“충돌 피하려 회피”(연합뉴스)**

-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空域)에서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23일(미 현지시간) 자칫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치 상황을 조성했다고 미 국방부가 24일 밝힘.
-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서해와 동중국해 사이의 공역을 비행 중이던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의 아래로 중국군 J-10 전투기 2대가 전속력으로 비행해온 뒤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가로막았음.
- 이에 따라 정찰기는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회피 기동’으로 정찰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이 밝힘.

■ **中전투기 ‘90m 초근접’ 위협말라 지적에 中 “美, 정찰중단하라”(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서해 인근을 비행하던 자국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 2대가 90m 거리까지 초근접 비행을 한 것에 항의한 데 대해 중국은 미국의 정찰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비행 질서와 안전을 수호한다”면서 “중국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인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적절히 이견을 처리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 루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미국 군함과 군용기는 장기간 높은 빈도로 중국의 연해와 국경에 근접한 지역을 정찰해 왔다. 이는 중국의 해상과 상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해 미국의

정찰행위가 원인을 제공한다고 지적함.

■ **WSJ “中, 美의 대북 군사행동 우려해 1천400km 국경통제력 강화”(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우려해 1천400여km에 이르는 북한과의 국경을 둘러싼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함.
- WSJ는 중국 정부 웹사이트,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결과 이런 동태가 작년에 시작돼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변화를 노출했다고 설명함.
- 새 국경수비여단의 배치, 드론(무인기)을 통한 산악지역 24시간 정찰, 핵이나 화학무기 방어를 위한 벙커 구축 등이 변화 내용임.

2017. 7. 26.

■ **화남 美, 中 겨냥해 “제재 강화…대가치를 짓 일방조치 불사”(연합뉴스)**

-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국제사이버보안 소위에 출석해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발언함.
- 손튼 부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또 “누구든 제재를 회피하고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 거래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발언함.

■ **中, 북중접경서 세관단속 강화하라는 美주문에 거부 입장 확인(연합뉴스)**

- 북중 접경에서의 불법무역을 막기위해 중국 당국이 세관 단속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청에 중국이 거부 입장을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제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 중미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함.
- 루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어떤 국가든 자국법에 근거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외의 단독제재에 반대한다”면서 “만약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국내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함.

2017. 7. 27.

■ **트럼프 압박에 쌀 최대생산국 中, 미국산 쌀 수입절차 착수(연합뉴스)**

- 27일 중신망에 따르면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간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양국이 미국산 쌀의 수입 검역 절차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수입 허용 준비에 들어감.
- 당시 미국 농업부와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미국산 쌀 수입의 위생 요구와 관련된 의정서’에 서명함.
- 이는 중국의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과 식품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첫 법률적 조치임.

나. 미·일 관계

2017. 7. 26.

■ **미일, 내달 중순 외무·국방장관회의 개최 조율...대북공조 강화(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가 내달 17일을 전후해 외무·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안보협의회의(2+2)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간 이 협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리게 됨.
- 협의회에선 북한 대응 방안과 탄도미사일 방위(BMD) 체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2017. 7. 28.

■ **日언론 “美, 일본에 北과 거래 중국은행 계좌 폐쇄해달라 요청”(연합뉴스)**

- 아사히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독자 금융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은행이 일본의 대형은행 2곳에 국제 송금 전용 계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함.
- 미국은 이 메가뱅크들이 북한의 국제거래 경유지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에 단둥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계좌를 폐쇄할 것을 요청함.
-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다. 미·러 관계

2017. 7. 22.

■ 트럼프 러 제재해제 합부로 못한다...美하원 25일 러 제재안 처리(연합뉴스)

-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22일(현지시간) 하원 지도부가 상원이 앞서 의결한 러시아 제재안을 오는 25일 표결에 부쳐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함.
- 상원이 지난달 14일 97대 2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한 러시아 제재안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기존 제재안을 성문화해 그 효력을 강화했으며 또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과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 내용을 담고 있음.
- 제재안은 아울러 미 의회가 표결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대(對)러시아 정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세션스 법무, 작년 러 대사와 ‘대선논의’...美정보당국에 포착”(연합뉴스)

- 워싱턴포스트(WP)는 전·현직 미 당국자를 인용, 미 정보당국이 작년 대선 기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와 2차례 만나 대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같은 내용은 미 정보당국이 키슬랴크 대사의 상부 보고를 감청하면서 드러났다고 WP는 보도함.
-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과 키슬랴크 대사가 대선 당시 수차례 만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대선 관련 정보를 논의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됨.

2017. 7. 23.

■ 美의회 북한-러시아-이란제재법 패키지 처리키로...25일 하원표결(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북한, 러시아, 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키로 함.
- 트럼프 정부는 상원이 지난달 새 러시아 제재안을 통과시키자 “새 제재안이 행정부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대러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새 제재안은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로비활동을 벌여왔음.

- 러시아 제재안은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함.

■ 크렘린, 美 의회 대러시아 추가제재법안 추진에 “아주 부정적”(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대(對)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 채택을 추진하는 데 대해 크렘린 궁이 강한 불만을 표시함.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지난 22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하원이 채택하려는 대러 추가 제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부정적”이라고 답변함.
- 추가 제재안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내전에 개입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기존 제재안을 성문화해 그 효력을 강화한 동시에 러시아 정부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과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함.

■ 로저스 美NSA 국장 “러시아와 사이버 협력할 시점 아니다”(연합뉴스)

- 마이클 로저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미·러 사이버 안보 협력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 로저스 NSA 국장은 이날 콜로라도 주(州)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 ‘미·러 사이버 보안대 창설’에 대해 “아마도 지금은 최적의 시점이 아니다”라고 발언함.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푸틴 대통령과 가진 별도의 양자회담에서 먼저 양국 간 사이버 공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2017. 7. 24.

■ 백악관 “美정부, 러시아 제재 법안 기쁘게 지지”(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일단 지지 입장을 표명함.
-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ABC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러시아를 강경하게 대하는 것을 지지하고, 특히 러시아 제재를 지지한다”고 발언함.

- 샌더스 대변인은 “법안의 원안은 부실하게 작성됐지만, 하원과 상원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의회가)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현재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 푸틴 “우리가 했다면 발각되지 않아”…트럼프에 해킹 부인(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사이버 능력이 우수해 해킹했다면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측의 해킹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함.
-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사이버 요원들은 은밀한 컴퓨터 네트워크 작업에 능숙해 그들이 미국 민주당전국위원회(DNC)의 시스템에 손을 댄다면 발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러 “美 회람 안보리 대북 결의안 수용 못해…北 경제 악화 겨냥”(연합뉴스)

- 이달 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
-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현지시간) “결의안에 대한 조율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결의안에는 아주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여러 조항이 들어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몇몇 조항들도 있다”고 발언함.
- 이어 “안보리 결의는 북한 경제 고사(枯死)를 지향해선 안되는데 현 결의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함.

2017. 7. 25.

■ 트럼프 사위 쿠슈너 청문회 출석…“러시아와 공모 안했다”(연합뉴스)

- 미국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24일(현지시간) 마침내 청문회에 출석함.
- 이날 오전 밝은 표정으로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 뒤 청문회장으로 빠르게 이동한 쿠슈너 선임고문은 출석에 앞서 공개한 11쪽짜리 성명에서 예상대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함.

- 또 청문회를 마친 뒤 백악관 기자들 앞에서 러시아 인사들과의 접촉에 전혀 부적절함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함.

■ **美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지원 검토”...러시아 ‘발끈’(연합뉴스)**

- 러시아를 등에 업은 반군과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미국 정부가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對) 러시아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커트 볼커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는 25일(현지시간) 영국의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무장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크렘린 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화브리핑을 통해 “긴장을 촉발하거나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조치도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무기지원 검토는 평화정착노력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발언함.

2017. 7. 26.

■ **크렘린, 美 대러 추가제재 추진에 “러-미 관계에 슬픈 일”(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북한·이란·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가결하면서 대러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함.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아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체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 법안에 대한 입장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취해질 것”이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보복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함.
- 페스코프는 “지금으로선 이 소식이 러-미 관계와 그 발전 측면에서 아주 슬픈 일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면서 “또 국제법과 국제통상관계 측면에서도 슬픈 일”이라고 지적함.

2017. 7. 27.

■ **러시아, 美 추가 제재 움직임에 보복책 마련(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북한·이란·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가결하면서 대러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는 27일(현지시간) 자국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35명의 미국 외교관을

- 추방하고 주러 미 대사관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러시아는 또 한반도 사태 등을 포함한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를 거부하고, 미국 원전에 공급되는 농축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017. 7. 28.

■ **푸틴, 美 대러 추가 제재 움직임에 보복 조치 경고(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추진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보복 조치를 경고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를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러 추가 제재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는 동맹국들(유럽연합)의 희생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정학적 우위를 이용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함.
- 푸틴은 “대러 제재는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불법이며 국제 통상 원칙과 국제통상조직의 규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아직 아주 신중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대한 야비한 행동을 끝없이 참을 수는 없다”고 보복 조치를 예고함.

라. 중·일 관계

2017. 7. 24.

■ **“日 ‘군함도’서 저지른 죄악 공개하라”…중신화통신 ‘공세’(연합뉴스)**

- 일본은 2차대전 당시 ‘군함도’에서 저지른 죄악을 공개하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강하게 요구함.
- 통신은 “일본은 2년전 명치시대의 일본공업혁명 유산으로 이 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했다”면서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이 섬의 등재를 허용하면서 열악한 강제노역의 역사를 소개하도록 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어, 그럼에도 “현재 새로 만든 ‘군함도’를 설명하는 안내판에는 강제징용과 학대에 관한 내용은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역사와 세계 인민의 면전에서 다시 한 번 ‘선택적 기억상실’의 재능을 보여줬다”고 비난함.

2017. 7. 25.

■ **中 해경선, 日과 영유권분쟁 센카쿠 해역에 또 진입(연합뉴스)**

-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이 25일 일본과 영유권분쟁을 겪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센카쿠 해역에 잇따라 진입한 것을 확인함.
- 해상보안본부는 이 중 1척은 기관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인근 해역에서 나가라고 경고함.

■ **日 ‘중국산 관세 특혜 2019년 이후도 사실상 유지(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해주던 특혜 관세를 폐지하려다 정치외교 관계를 고려해 2019년 이후에도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지가 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19년 개발도상국에 수입 관세를 우대해주는 특혜 관세를 선진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으로 확대할 방침임.
- 의류, 광공업, 식품 등 600개 품목이 대상이 되며, 실질적으로는 중국, 멕시코,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수혜국임.

2017. 7. 27.

■ **中, 스파이혐의 구속 일본인 4명 석방…“혐의 해소”(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스파이혐의로 구속했던 일본인 4명을 석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함.
- 중국 정부는 전날 일본 정부에 산둥(山東)성과 하이난(海南)성에서 국가안전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구속한 일본인 남성 6명 중 4명에 대해 “혐의가 해소돼 무죄 방면했다”고 통보함.
- 중국 정부는 풀려난 4명의 어떤 혐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음.

2017. 7. 28.

■ **“日,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中기업 2개 추가…자산동결 대상 확대”(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로 중국 기업 2개 단체를 포함해 총 5개 단체와 개인

9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산동결 대상에 기존 ‘핵·미사일 계획에 관여하는 사람’ 외에 금융 서비스, 수송업에 관여하는 사람, 석탄을 포함해 광물무역에 관여하는 사람 등을 추가하기로 함.
-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포함해 제재 대상은 총 63개 단체, 개인 79명으로 확대되며 이 중 중국 단체는 3개, 개인은 4명으로 늘어난다고 통신은 보도함.

마. 중·러 관계

2017. 7. 25.

■ 미국 대러제재 강화에 중국 미소...“중러무역·투자 호재”(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중국이 반색하는 분위기를 보임.
-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강해질수록 중국이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는 게 중국 통상 전문가들의 주장임.
- 마이밍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연구원은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강화할수록 유럽연합(EU)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방해받게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동쪽(중국)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다”고 주장함.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II 북한인권

■ 개요

| 분류 | 일자 | 내용 |
|----------------------------|--|--|
| 북한인권 국제동향 | 7.22 | 유엔 北인권보고관 “남북, 탈북종업원 정치적 이용 말아야”(연합뉴스) |
| |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강제복송 급증 우려... 해결책 찾아야”(미국의소리) |
| | | 美, “북한여행 전면 금지” 승인... “심각한 체포 위험”(미국의소리) |
| | | 英, “북 국제인권규범 침해 심각한 우려”(자유아시아방송) |
| 북한인권 내부동향 | 7.25 | 北, 12년 연속 ‘국민을 위협 아래 살게 하는 나라’ 지목(미국의소리) |
| | | 獨 인권단체, 유럽 내 북 노동자 차단에 주력(자유아시아방송) |
| | | 유엔 “북한, 최근 식량배급 300g으로 줄여... 권장량 절반”(미국의소리) |
| | 7.27 | 美하원, 北인권법 재승인안에 ‘미군유해 송환’ 추가(연합뉴스) |
| 북한인권 남한동향 | 7.25 | 北 두만강 수해지역 식량난 악화(자유아시아방송) |
| | 7.27 | 인권위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해야”(연합뉴스) |
|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 7.22 | “‘복송위기’ 탈북민 일가족 5명, 中 선양서 집단자살”(연합뉴스) |
| | 7.23 | 경찰, ‘재입북 우려’ 소재불명 탈북민 현황 파악 착수(연합뉴스) |
| | 7.24 | 中, 유엔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탈북자는 난민 아냐”(연합뉴스) |
| | | HRW “탈북자 난민 아니라는 중국 인식 잘못”(자유아시아방송) |
| | 7.25 | 美,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옹호 관련 “탈북자 처우 깊이 우려”(미국의소리) |
| | 7.26 | 美 하원, 한인 이산상봉 법안 발의... 대북제재법안은 상원서 ‘멈칫’(자유아시아방송) |
| | 7.27 | 강제복송 탈북자들 “가혹한 처벌 비인간적 취급”(미국의소리) |
| | | 부시 정책연구소, 미국 내 탈북난민 8명에게 ‘북한자유장학금’ 지급(미국의소리) |
| | | “국군포로 송환 더 분발해달라”(자유아시아방송) |
| | | |
| 7.28 | ‘탈북입북-탈북’ 40대에 간첩 혐의... “탈북자 연락처 北 전달”(연합뉴스) | |
| 대북지원 | | 특이사항 없음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7. 22.

■ 유엔 北인권보고관 “남북, 탈북종업원 정치적 이용 말아야”(연합뉴스)

-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남북 양측에 이들 여성의 사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과 개개인의 이익과 안전 보호, 그리고 가족의 요구에만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그는 방한 기간 종업원들의 상황에 대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으며 “이들이 안전하며 구금돼 있지 않다는 점에 안도하는 한편, 이들의 사례와 관련해 일부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출처들로부터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설명이 불일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음. 그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관여하려는 최근의 구상과 노력에 (이 문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함.
- 키타나 보고관은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장기적 평화, 안보, 인도주의적 협력을 위해서 북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강제복송 급증 우려...해결책 찾아야”(미국의소리)

-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 내 강제복송 급증에 우려를 표명하고 강제복송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힘.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21일 이번 한국 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복송 책임규명 논의에 있어 가해자 처벌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모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으며 구금돼 있지 않다는 점에 안도했다고 말함.
- 키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이번 방문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전 현직 외교 인사들도 만났다면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개념을 지지하고 이해하며 이런 관여와 대화의 힘을 믿는다고 말함.

■ 미 정부 “북한여행 전면 금지” 승인...“심각한 체포 위협”(미국의소리)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함.
-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협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틸러슨 장관이 이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 조치는 다음주 관보에 게재되고 이후 30일 뒤인 다음달 말부터 발효된다고 말함.
- 노어트 대변인은 이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여행에 유효하지 않다고 말함. 다만 확실한 인도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은 국무부에 신청해 기한이 제한된 특별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힘.

■ 영국 “북 국제인권규범 침해 심각한 우려”(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외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6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Human Rights and Democracy: 2016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Report)’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지적함.
- 북한이 앞서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고문, 성폭행,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형과 실종은 물론 ‘굶주림’을 주민 통제와 처벌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영국 정부는 북한이 이처럼 국제인권규범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해 북한을 30개 ‘인권우선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함.
-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해외에서 인권문제에 관한 영국의 정책을 조명한다고 밝힘. 북한을 포함한 30개 ‘인권우선대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임.

2017. 7. 25.

■ 북한, 12년 연속 ‘국민을 위협 아래 살게 하는 나라’ 지목(미국의소리)

-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국제소수계인권연대’(MRG)는 최근 ‘위협 아래 사는 사람들’ (People under Threat 2017)이란 보고서를 공개함. MRG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 각 나라를 정치적 안정성, 내부 분규, 법 지배력, 국제무역 위험도, 대량학살 여부 등 10개 항목으로 평가해 이를 근거로 순위를 선정해옴.
- 올해 조사 대상국 70개 나라 중 북한은 34위에 오름. 이는 지난해 보다 세 계단 낮아진 순위임.

- 북한은 정치적 안정성과 법 지배력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음. 특히 시민참여와 책임 부분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무름. 보고서는 북한 총평에서 북한은 올해 고립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에게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 독 인권단체, 유럽 내 북 노동자 차단에 주력(자유아시아방송)

- 폴란드 즉 뵐스까 등 유럽국가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근절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독일의 인권단체 ‘국제인권협회’가 밝힘.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국제인권협회(IGFM)’의 마틴 레센틴(Martin Lessenthin) 대변인은 이 단체가 올해 유럽에 파견된 북한 노예 노동자들의 실태에 관한 조사 활동 등 북한 인권을 알리는데 주력한다고 강조함.
- 북한 당국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약 5만명에서 6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현대판 노예와 같은 노동 착취를 통해 연간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레센틴 대변인은 최근 독일에서 북한의 인권과 핵 야욕 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함.
-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독일의 인권단체 관계자도 유럽국가들이 핵과 미사일 자급에 유용되는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 고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함. 따라서 오는 9월 독일의 19대 연방의회 선거를 치른 후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 의원들에게 유럽 내 북한 노동자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개선 노력에 앞장서 주도록 촉구할 계획임.

■ 유엔 “북한, 최근 식량배급 300g으로 줄어…권장량 절반”(미국의소리)

-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배급을 주민 한 명 당 하루 300g으로 줄였다고 유엔이 밝힘.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는 24일 공개한 ‘7월 18일~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배급을 400g에서 300g로 줄였으며,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밝힘.
- 하루 300g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규모임.
-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6월 주민 한 명 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함. 하지만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7월 들어 식량 배급을 300g으로 25%가량 줄인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은 지난해 7월에도 주민 한 명 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함. 이는 지난

2013년 7월 390g, 2014년 7월 40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양임.

- 북한 당국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15년 7월 한 달 동안, 초기에는 310g을 배급했다가 중순에는 250g으로 줄인 바 있음.

2017. 7. 27.

■ 美하원, 北인권법 재승인안에 '미군유해 송환' 추가(연합뉴스)

- 미국 하원에서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미국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의 송환 재개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남.
- 27일 하원 외교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외교위 심의를 앞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의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됨.
- 수정안은 ▲ 6·25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송환 재개 ▲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북한 친지 상봉 ▲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에 대한 안보 리스크 평가와 관련해 현재 국무부가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노력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7. 25.

■ 북 두만강 수해지역 식량난 악화(자유아시아방송)

- 지난해 큰물피해를 입은 북한 두만강 유역 주민들의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쌀값은 내리는데 서민 식량인 강냉이 값이 내리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 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해 큰물피해를 입었던 함경북도 회령시의 통 강냉이 가격이 kg당 내화(북한 돈) 2천1백 원으로 올랐다”고 “반면 입쌀 값은 kg당 내화 5천2백 원으로 확 내렸다”고 함.
- 한편 25일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해 큰물피해를 입었던 두만강연선 주민들이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고(떼우고) 있다”며 “지난해 두만강 유역은 큰물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의 강냉이 밭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피해는 적었다”고 말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7. 25.

■ 인권위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해야”(연합뉴스)

- 탈북민 일가족 5명이 강제 복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복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인권위는 2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 탈북민 강제 복송 과정에서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함.
- 인권위는 중국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복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상을 묵과하고 복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복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함.
- 이어 한국 정부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한편,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7. 22.

■ “‘복송위기’ 탈북민 일가족 5명, 中 선양서 집단자살”(연합뉴스)

-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 간부의 일가족 5명이 최근 ‘강제복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자살한 것으로 알려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자 일가족이 며칠 전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 선양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혔다”면서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강제복송 위기에 처하자 이를 비관해 음독자살했다”고 밝힘. 이들의 구체적인 자살 장소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안 소장에 따르면 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의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 3남매 등 모두 5명으로 이들은 북한에서 출발할 때 이미 독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짐.

2017. 7. 23.

■ **경찰, '재입북 우려' 소재불명 탈북민 현황파악 착수(연합뉴스)**

- 최근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탈북여성 임지현씨의 재입북 여부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탈북민의 소재불명 현황과 국내 거주 실태 파악에 나선다.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탈북민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재입북하지 않도록 예방하라는 지시를 최근 일선 경찰서에 내렸다고 밝힘.
-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자의로 재입북했는지, 아니면 납치됐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다른 측면에서 재입북 등을 우려할 만한 이들도 있어 차제에 소재불명 탈북민 현황을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함.
- 경찰은 아울러 취업이나 거주 등에 어려움을 겪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탈북민이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통일부, 고용노동부, 관할 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과 이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설 계획임.

■ **中, 유엔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탈북자는 난민 아냐”(연합뉴스)**

-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요청에 대해 중국이 탈북민은 난민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고 사실상 강제송환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 루 대변인은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강조함.
- 루 대변인은 이어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중국 사법기관의 정당한 집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임.

2017. 7. 25.

■ **HRW “탈북자 난민 아니라는 중국 인식 잘못”(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와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인권단체가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 강제북송을 정당화하려는 중국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이 큰

나라여서 자진해서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비난함. 탈북자들은 박해를 피해 탈출했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고문 등의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유엔이 규정한 ‘난민’이라는 것임.

- 따라서 중국이 자국 내 탈북자들과 유엔 난민기구 관계자의 면담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함. 중국이 북한 정권의 주민 인권 유린을 방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토마스 오헤야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도와야 한다는 지적함.

■ 미국,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옹호 관련 “탈북자 처우 깊이 우려”(미국의소리)

-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모든 나라가 자국 영토 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보호하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앞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라며 강제송환을 계속할 것임을 밝힘.
- 이에 대해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 북한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처우를 깊이 우려한다고 말함. 또 미국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 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2017. 7. 26.

■ 미 하원, 한인 이산상봉 법안 발의…대북제재법안은 상원서 ‘멈칫’(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하원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 재개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친지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나서도록 규정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북한 내 미군유해 발굴작업 재개와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미국 국무부 등 관련 부처에 규정한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돼 심의 중임.
- 26일 미 하원에 따르면, 지난 달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외교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됨.

2017. 7. 27.

■ **강제복송 탈북자들 “가혹한 처벌 비인간적 취급”(미국의소리)**

-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강제복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강제복송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함.
-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힘.
- 또 심문 단계에서 탈북자들이 기아 상태에 빠지도록 고의적으로 식량 배급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밝힘. 아울러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장기간 자의로 구금하고,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함.

■ **부시 정책연구소, 미국 내 탈북난민 8명에게 ‘북한자유장학금’ 지급(미국의소리)**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센터 산하의 부시 정책연구소가 8명의 탈북난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함. 북한자유장학금으로 명명된 이 장학금은 미국 내 탈북난민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탈북자 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의 그레이스 조 부대표 등 8명이 미 남부 텍사스 주 댈러스에 있는 부시 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자유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됨.
- 부시 정책연구소는 26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 장학금은 탈북자들이 미국인으로서 고등교육을 받고 건설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번에 처음 수여되는 북한자유장학금 대상자에는 조 부대표 이외에도 뉴욕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꽃제비 출신의 탈북자 조셉 김 씨와 뉴욕에서 정보기술을 공부하고 있는 저스틴 서 씨, 그리고 최근 켄터키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할 계획인 서향 씨가 포함됨.

■ **“국군포로 송환 더 분발해달라”(자유아시아방송)**

- 정전협정일을 맞아 한국에서는 탈북한 국군포로를 위로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음. 지난 7월 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으로 오찬간담회가 열림.
- 현재 아직도 5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추산

하고 있음. 지금까지 탈북해 남한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80명임. 이 중 40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생존해 있음.

■ **보위성 “탈북자 재입북 회유에 가족이 나서라”(자유아시아방송)**

- 국가보위성이 최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북한 내 가족을 설득시켜 그들을 다시 귀순시키라는 기밀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지역담당 보위지도원들은 탈북자 가족 회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이 주민탈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는 탈북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원래 살던 지역과 직장에 원상복귀 시킨다는 방침을 각 지역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3일 “이달 초 국가보위성에서 각 지역 보위부들에 내부적으로 기밀지시를 내렸다”면서 “담당지역의 탈북자 가족을 설득해 한국에 있는 탈북 가족들을 데려오도록 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것”이라고 언급함.
- 소식통은 이어서 “지역 담당 보위지도원이 조직하는 회의는 대체로 탈북시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회의와 별도로 탈북자의 개별가정을 찾아다니며 회유 반, 협박 반으로 탈북한 가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7. 7. 28.

■ **‘탈북-입북-탈북’ 40대에 간첩 혐의…“탈북자 연락처 北 전달”(연합뉴스)**

- 북한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간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김.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모(41)씨는 2015년 3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옴.
- 그러다 지난해 9월 강씨는 돌연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감. 이후 같은 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함.
- 강씨는 그러나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함. 강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한 뒤 최근까지 수사해 옴. 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입북해 이를 국가보위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됨.

- 경찰은 강씨가 재탈북한 이유도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달 초 강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함.

5. 대북지원

- 특이사항 없음.